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윤 건

국문요약

본 논문은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통합에 대하여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준거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사회통합과 그것의 목적으로서의 국민행복 간 관계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사회통합의 요소를 결속, 포용, 갈등의 세 요소로 구분하고 결속은 신뢰, 참여, 정체성, 시민성, 연결성, 포용은 소수자 포용과 이동성, 갈등은 정치경제갈등과 사회갈등의 하위요소로 구분하고 이러한 하위요소들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시민성, 정체성, 연결성, 이동성 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신뢰, 참여, 소수자 포용, 정치경제갈등(역), 사회갈등(역)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사회통합 요소들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수자 포용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참여는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히 참여나 소수자 포용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회통합, 국민통합, 결속, 포용, 갈등, 국민행복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양한 축으로 국가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인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위에 정치갈등, 세대갈등, 종교갈등 등,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중첩되면서 국민들은 상당한 혼란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선진국으로서의 초입에서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에 전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사회통합정책기구로서의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첫 번째 위원회로 출범시킨 것은(대통령실, 2022)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전과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확산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 측면에서 대전환 시대 갈등 예방과 대응, 정치·지역 측면에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경제·계층 측면에서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로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경제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사회·문화 측면에서 소통과 연대 기반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세대·젠더 갈등, 상호관용의 정치문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사회적 연대, 다원민주주의, 계층이동성, 다양성과 포용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적절하지만 사회통합 자체의 목적만 강조되고 그것의 수단성으로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회 분열과 갈등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의미 이외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목적이자, 효용가치의 의미를 가지면서, 사회통합정책의 공급자로서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국민행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통합의 목적을 국민행복으로 하여 명확한 준거점을 갖는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정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발전을 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국민행복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회통합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민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우창빈, 2013), 특히 사회통합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Becchetti et al., 2014; Delhey and Dragolov, 2016; 심수진, 2016; 전지훈·정문기, 2017). 정책적으로 국민행복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규정(대한민국헌법 제10조)을 비롯하여, 역대정부에서 국정과제의 중요한 일부로서 추진되어왔다.²⁾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하여 국민행복을 국정의 중심에 두었으며,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행복을,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통합을 1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3).

본 연구는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실제 사회통합이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수단임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국가승인통계인 한국행정연구원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 조사데이터는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들과 국민행복에 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 이 자료는 일반국민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본다.

1)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k-cohesion.go.kr) 비전 및 핵심과제 참조

2) 김대중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추구권 실현 관점에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 활성화와 향수기회 확대’를(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98), 이명박정부에서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대한민국정부, 2008) 국정과제로 포함하였고,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국정전략으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윤석열정부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대한민국정부, 2022)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분석

1.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

1) 사회통합의 의미, 구성요소, 측정

사회통합 관련 최근 선행연구 분석은 사회통합의 의미/구성요소/측정, 사회통합의 영향요인, 사회통합의 결과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통합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있다. 이달휴(2019)는 사회통합의 개념에서 다양성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회통합 개념에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경우 집권적 방식이 아니라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분열과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통일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사고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지원(2021)은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면서 사회통합 개념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사회통합을 미시(개인)-중범위(사회조직)-거시(국가)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은 미시 차원에서 다원화된 개인이나 일반시민이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지적 합리모형, 중범위 차원에서 정부 내외부 하위조직 간 연합체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단정치모형, 거시 차원에서 국가 단위의 점증주의적 사회통합 모형으로 구분하면서, 국가가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포용하며 미시적, 중범위적 차원의 맞춤형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국가의 필수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적극적 개입과 보완 노력을 수행하는 모형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서는 OECD(2011)의 사회통합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강시온·배호중·문상호(2020)는 사회통합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포용은 소득계층 인식과 저축 박탈감, 사회적 자본은 신뢰감과 사회적 관계 수준, 사회적 이동은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 가능성과 사회적 이동의 중요도로 구분하였다. 정해식·구혜란·김성아(2017)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OECD 모형에 사회갈등을 포함하여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형 모델은 이선중(2021)의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지수의 하위요소로서 사회적 형평성 지수, 사회적포용지수, 사회적자본지수, 사회이동지수, 사회갈등관리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OECD 모형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있다. 여유진(2020)은 사회적 자본을 넘어서서 결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물질적 안녕의 문제와 심리적 결속의 문제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사회적 격차,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을, 후자의 경우 신뢰, 호혜, 연대, 소속감 등을 제시하였다. 윤건·김철우(2021)는 보다 적극적으로 결속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한다. 사회통합을 결속, 포용, 갈등으로 구분하고 결속은 다시 신뢰, 참여, 연결성, 정체성, 시민성으로,

포용은 소수자 포용성, 계층 이동성으로, 갈등은 경제갈등과 사회갈등으로 구분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제도적 차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권다운·백진영·최창용(2022)은 사회적 포용 중에서도 불평등을 강조하고, 사회갈등관리를 넘어서는 제도·거버넌스 영역을 포함한다.³⁾ 윤건·박준(2019)은 선행연구와 전문가조사를 토대로 사회통합 조건으로서의 거버넌스 역량과 경제적 안정성, 사회통합 상태로서의 결속, 포용, 갈등, 사회통합 목적으로서의 행복 등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조건과 상태, 목적을 포함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사회통합을 바라보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통합의 특정 국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 사회통합을 분열이나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통합과 분화의 분류기준으로 엘리트의 분화 정도, 사회 분열 정도를 지표로 활용한 김필(2022)의 연구,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채종현·전대욱(202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송정안(2018)은 사회통합의 상태 변수인 정치신뢰, 조건 변수인 정부 청렴도 변수를 중요하게 보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사회통합의 영향요인

다음으로 사회통합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우선 정치적 조건과 관련하여서 정수현·한의석·정희옥(2017)은 정당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20명의 정당조직원들을 대상으로 FGI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갈등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계층갈등과 세대갈등을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정당보다는 정부나 국회가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정당과 유권자 간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채종현·전대욱(2020)은 공론화 절차라는 제도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론화 절차가 정책수용성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순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이나 정책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은 갈등 촉발시 이를 완화시키지만 갈등을 촉발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고 공론화 방식이 숙의와 참여를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이것이 갈등 수준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adeem et al.(2022)은 정치제도의 질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135개국의 5년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정치제도의 질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반면 민족적 다양성, 소득 불균등성, 글로벌화 등은 사회통합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Kinnon(2020)은 사회보장제도와 포용성장 및 사회통합 간 관계를 논의하였는데, 포용성장이나 사회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서 사회적 공정성과 같은 사회통합의 요소를 높이기 위해서

3) 그들은 사회통합을 불평등, 사회적 자본, 제도·거버넌스 층위로 구분하고, 불평등 측정 변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보건·사회복지 종사자 비율, 의료기관 종사자 수, 전자기기 활용 여부, 정부 정책인지도 정도를, 사회적 자본 측정 변수는 배우자 유무, 총가구원수, 동거 자녀 수, 자녀·친구 등과의 연락 및 왕래 빈도, 가까운 지인 수, 정신적·경제적 도움 교류, 사회활동 참여 평균, 여가·복지시설 이용 경험 등을, 제도·거버넌스 측정 변수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수준 등을 사용하였다.

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조건과 관련하여 송정안(2018)은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조건을 설정하고 이것이 정치신뢰와 정부 청렴도라는 사회통합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OECD 31개국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적응도와 사회통합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노동시장 효율성, 기술·혁신, 인프라, 법적 보호 등, 네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정부 청렴도의 경우 초기값의 영향이 크지만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갈수록 공공부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신뢰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요소별로는 사법부 독립성 요인은 두 변수 모두에, 기업의 윤리적 행동 요인은 정부 청렴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조건과 관련하여 여유진(2020)은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탈 경험을 상대적 박탈과 절대적 박탈로 구분하고, 상대적 박탈은 기초 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문화 생활 및 사회적지지, 미래 대비, 자녀 양육 및 교육으로 절대적 박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측정하였다.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청년층은 사회적 포용과, 장년층은 사회적 신뢰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청년층은 기초생계의 박탈이 높을수록, 장년층은 문화와 사회적 지지에서의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한 국가의 사회통합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국내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경우 외부적 조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차원을 중시하고 있어 특히 관심을 끈다. 개발원조와 사회통합 간 관계에 대한 Danquah and Ouattara(2023)의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원조에서 사회통합이 강조되면서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이러한 개발원조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 협력과 존중을 증진시키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실제 개발원조와 사회통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강한 긍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3) 사회통합의 결과요인

사회통합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은 개인의 건강이나 외로움, 두려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다운·백진영·최창용(2022)는 사회통합과 노인의 심리적 건강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 2011년, 2014년, 2017년의 3개 자료를 통해 개인단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통합의 모든 변수가 심리적 건강 요소로서 만족도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및 지역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Browne and Leckey(2022)의 연구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커뮤니티 집단과 연결망에서 사회통합과 건강 간 긍정적 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오봉욱·최종복(2017)은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이 범죄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구조적으로 해체된 지역 사회의 경우 주민들이 통합과 유대가 낮으면 사회통제력이 낮다고 인식하여 높은 범죄발생 가능성 인식과 범죄피해 두려움 인식이 나타난다는 사회통합 이론을 적용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7,877명 자료 분석 결과 지역유대 증가시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allagher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항체반응에 대한 사회통합의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실제 둘 간의 관계를 외로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통합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외로운 감정을 나타냈고, 이는 더 낮은 항체반응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참여나 사회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강시온·배호중·문상호(2020)는 사회통합 인식 요인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결과 소득계층 인식, 저축 박탈감,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 가능성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소득계층 인식, 저축 박탈감, 신뢰감,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 가능성, 사회적 이동 중요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arhart(2022)는 지역커뮤니티 수준에서 사회통합이 범죄예방과 같은 사회적 통제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사회통합과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간 관계에서 상호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 실제 상호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Maguire-Jack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이 소속동네 빈곤(neighborhood poverty)과 아동학대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속동네 빈곤은 사회통합을 통해 아동학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김철우(2021)는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정부역량이 사회안전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그 사이에서 사회통합적 요소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신뢰, 참여, 연결성, 정체성, 시민성, 계층 이동성의 긍정적 매개효과, 참여는 부정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은 국가효율성이나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국가효율성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을 비교행정의 새로운 국가분류기준으로 활용하는 김필(2022)의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정부 확대 과정에서 사회 여러 부문 간 조율,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회의 완전통합/비통합과 행정부/입법부우위의 두 개 축을 활용하여 네 개 유형을 제시하고, 53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퍼지셋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면서 베트남과 같이 완전통합행정부우위형의 경우 정체성 혼란이 적고 국가 목표와 전략 추진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이선중(2021)은 지속 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OECD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통합 수준과 부패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통합지수를 구성하고 부패인식지수와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국가청렴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사회통합이 국가청렴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4)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윤건·박준(2019)의 연구를 참조하여 사회통합의 상태와 목적을 구분하고, 사회

통합의 상태를 결속, 포용, 갈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사회통합의 결과요인으로서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사회통합 변수와 사회통합의 결과변수를 분명하게 분리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에서 갈등 요소는 결속이나 포용 자체라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분리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보아야 한다. 셋째, 결속은 내면적이고 심리적이며 포용은 상대적으로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로 보아 분리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사회적 이동성은 해당 사회가 포용적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최근 선행연구들을 보면 사회통합과 사회통합의 결과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이 국가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목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국민행복은 사회통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회통합과 국민행복간 관계를 다루는 것은 다른 한편 사회통합의 준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갈등과 분열이 없는 사회가 가능하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때 사회통합의 적절한 준거점이 필요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발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차원의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행복은 사회통합의 적절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사회통합이 국민행복에 분명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통합이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준거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1) 국민행복의 의미, 구성요소, 측정

이하에서는 국민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이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최근의 국민행복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국민행복의 의미/구성요소/측정에 관한 연구와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민행복 의미에 대한 연구로서 구교준·임재영·최슬기(2015)는 행복의 정의, 측정,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 그들은 행복의 정의와 관련하여 그리스 철학의 두 가지 접근근으로 만족/쾌락 기반의 hedonism과 가치/역량 기반의 eudaimonism을 적용한다. 행복의 측정의 경우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물리적 조건(소득, 소비, 교육, 주거 형태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HDI, LDI, BLI)와 주관적 효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주관적/심리적 안녕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행복 정의를 기초로 주관적 효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만족/쾌락적 요소와 가치/역량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과

가치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는 이후 국민행복지수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희철·구교준(2019)은 역량 중심의 국민행복지수를 도출하여 OECD 국가들에 적용하였다. 우선 Sen의 역량이론에 기반하여 역량을 기초역량과 상위역량으로 구분하고 기초역량에 건강, 안전, 환경, 경제 등을 상위역량에 교육, 관계, 여가, 정치 등을 배치하고, 여기에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9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국민행복지수 산출 결과, OECD 31개 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4위로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군집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속한 군집은 환경과 삶의 만족도에서 상위 군집과 격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철·구교준·김지원·박차눔(2020)은 한국형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희철·구교준(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Sen의 역량이론을 기반으로 행복을 개념화하고 구교준 외(2017)의 논의를 기초로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등의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역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조사 결과 건강, 경제, 안전, 환경, 교육 등이 높게 나타나고, 여가, 관계, 사회참여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의 기초자치단체 적용 결과 수도권, 호남 지역이 높고, 영남권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행복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연구가 있다. 남주하·김상봉(2016)의 국민행복지수에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세 개 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1인당 정부부채, 1인당 자본스톡 등으로, 삶의 질은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 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등으로 경제/사회안정 및 안전의 경우 중산층 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 수준, 자연재난/재해 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중항목 중에서 고용, 건강,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 사회안전, 민간교육비 지출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2) 국민행복 영향요인

국민행복 영향요인 연구를 보면 우선 구교준 외(2015)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영향요인을 제시하는데, 개인 수준에서는 소득, 일(일의 유무, 실업), 건강(육체, 정신), 교육(정규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취미교육) 등의 영향을, 사회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자유, 정치안정, 사회신뢰, 비교성향, 상호협력, 주거 환경 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고혜진·정해식(2022)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행복 간 관계를 실증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 상호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 중 근로소득이 있는 3,63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행복감도 높아지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영향으로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Choi(2021)는 개인 수준에서 여가/일에 대한 만족과 우울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일에 대한 만족과 행복 간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65세 이상 4,890명

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울감이 여가/일에 대한 만족과 행복 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여가/일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Kortsch et al.(2022)은 직장에서의 행복을 중심으로 원격근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공공은행의 근로자에 대한 실험 결과 원격근무 근로자들의 행복감이 모든 차원에서 높게 나타났고, 몰입도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민주주의나 자유, 정치안정과 같이 제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선옥·권지성·정해식·김성아(2021)는 국민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행복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 단계와 성별을 고려하여 표집된 24명에 대한 개별면접 결과 국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미인지, 선별적 영향 인식, 보편적 영향 인식 등이 나타났고, 세대별로는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행복과 국가의 역할을 분리하는 경향이, 청년과 장년층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의 기능별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신현재·김병섭(2019)의 연구에서는 OECD 28개국의 2005~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기능별 지출 중에서는 공공안전, 문화, 국방, 사회보호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DP와 법치주의 수준은 긍정적, 실업률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Spruk and Kešeljević(2016)은 경제적 자유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빈호벤 행복 데이터셋(Veenhoven's happiness dataset)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다 나은 경제적 제도, 보다 높은 경제적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들이 보다 큰 주관적 웰빙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는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의 영향을 관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Clarke(2022)는 자유를 제약의 부재로 이해하는 공리주의자들은 자유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았고, 최근 연구들에서 이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실증연구가 어려운 것이 그러한 행복의 증진이 자유가 아니라 그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나 발전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행복의 국가별 수준을 실증분석한 한인섭·임채홍·김정렬(2017)의 연구에서는 국민행복을 국가 내 국민이 인식하는 삶의 질의 총체로 보고 국가레짐과 거버넌스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행복 측정에는 NEF 행복지수에서 삶의 만족도를, 거버넌스 측정에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지수(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과 무폭력, 정부효과성, 규제와 질, 법치주의, 부패 통제)를 활용하였다. 2006년, 2009년, 2012년 3개 연도의 136개 국가별로 구축한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전체 국가 통합 모델에서는 시민의 참여, 책임성, 정부효과성, 부패통제 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섭·안선민·이수영(2015)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청렴도, 정부 신뢰도, 공공서비스 만족도, 재정자주도, 세출액, 사업체수 등, 거시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역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 조사센터의 2013년 삶의 질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서비스, 교육문화서비스, 소방안전서비스, 재정자주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김병섭·최성주·최은미(2015)는 공공서비스, 삶의 질, 국민행복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3년 삶의 질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 교육, 편의, 생활환경 등의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삶의 질을 매개로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환경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일수록 삶의 질에 대한 영향도가 높았다. Baschera and Schneider(2022)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주민들의 행복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주민 212명에 대한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 도시계획이 행복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도시계획은 시간사용인식, 커뮤니티 활력, 생태적 다양성, 회복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변수들로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기둥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3) 국민행복과 사회통합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적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갈상돈(2017)은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공화주의적 제도화 방안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동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갈등사안으로 보고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이 노동자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공존과 상생 기반의 공화주의적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체성, 곧 공동체 인식의 영향을 연구한 전지훈·정문기(2017)의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마을기업 구성원을 중심으로 공동체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행복 영향요인을 개인 차원, 정부행정 차원, 생활환경 차원으로 구분하고 개인 차원은 건강 인식, 긍정성 인식, 소득, 공동체활동기간, 정부행정 차원은 정치경제 자유, 정치적 안정성, 책임성 인식, 법의 준수, 정부 부패인식, 정부 성과인식, 생활환경 차원은 재난안전 인식, 녹지환경 인식, 생활의 질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체 인식 요인은 공동체성과 공동체역량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충남 마을기업 활동 주민 319명에 대한 조사데이터 분석 결과, 건강 인식, 긍정성 인식, 정부행정 차원의 긍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인식 중에는 공동체성이 정부행정 차원의 행복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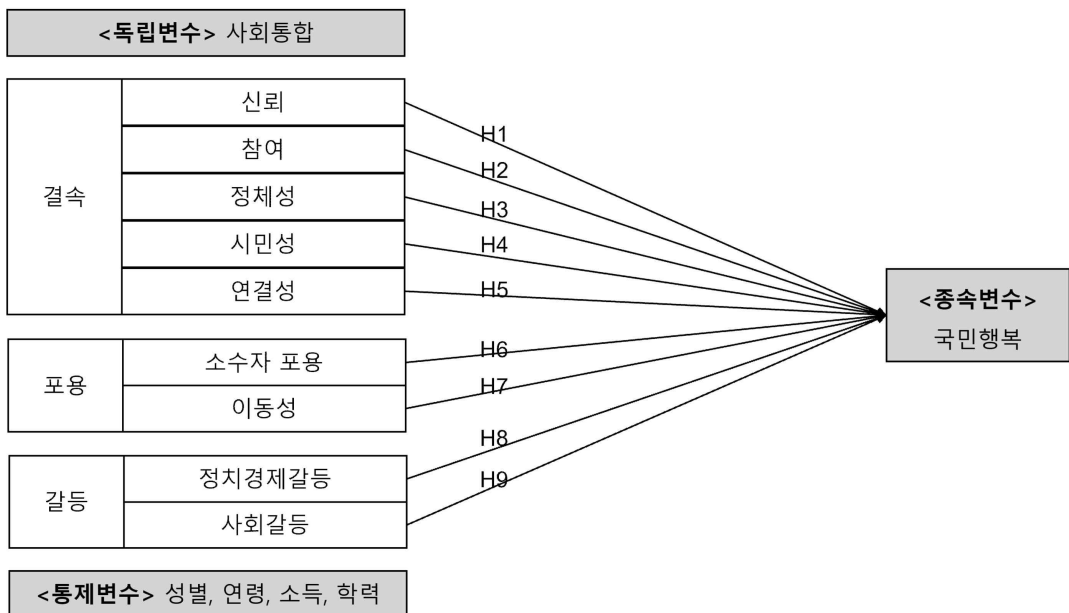
정부나 거버넌스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회통합과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연결해 보면 일정한 의미가 있다. 즉 정부 요인이 국민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통합의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정부가 국민행복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영향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국민행복이 사회통합의 영향을 받는다면 정부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역할은 사회통합을 매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윤건·박준(2019)에서는 사회통합의 조건과 상태, 목적을 구분하고 사회통합의 조건으로서의 거버넌스역량과 사회통합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사이에서 사회통합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는데, 실제 거버넌스역량이 사회통합의 상태 요소들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분석틀과 가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윤건·박준(2019)의 논의를 따라 결속, 포용, 갈등으로 구분하고, 결속은 다시 신뢰, 참여, 정체성, 시민성, 연결성, 포용은 소수자 포용과 이동성, 갈등은 정치경제갈등과 사회갈등의 복수 하위요소로 구분한다. 이러한 각각의 사회통합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국민행복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분석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소득, 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들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분석틀



구체적인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은 사회통합의 세 개 요소인 결속, 포용, 갈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결속 관련 가설은 결속의 구성요소들인 신뢰, 참여, 정체성, 시민성, 연결성 등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포용 관련 가설은 포용의 구성요소로서 소수자 포용, 이동성 등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 관련 가설은 정치경제갈등, 사회갈등 등이 국민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세부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결속의 요소들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신뢰가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1)

가설 1-2: 참여가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2)

가설 1-3: 정체성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3)

가설 1-4: 시민성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4)

가설 1-5: 연결성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5)

가설 2: 포용의 요소들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소수자 포용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6)

가설 2-2: 이동성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7)

가설 3: 갈등의 요소들이 국민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정치경제갈등이 국민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8)

가설 3-2: 사회갈등이 국민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H9)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고 OLS(Ordinary Least Square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tata/SE 15.1을 이용하였다.

$$HAP = \alpha + \beta_1 TRU + \beta_2 PAR + \beta_3 IDE + \beta_4 CIT + \beta_5 NTW + \beta_6 MIN + \beta_7 MOB + \beta_8 PEC + \beta_9 SOC \\ + \beta_{10} SEX + \beta_{11} AGE + \beta_{12} FIN + \beta_{13} SCH + \epsilon$$

[HAP: 국민행복, TRU: 신뢰, PAR: 참여, IDE: 정체성, CIT: 시민성, NTW: 연결성, MIN: 소수자 포용, MOB: 이동성, PEC: 정치경제갈등, SOC: 사회갈등, SEX: 성별, AGE: 연령, FIN: 소득, SCH: 학력, α : 상수, β_i : 각 변수별 계숫값, ϵ : 오차항]

2. 분석 데이터 및 변수의 측정

분석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통계로서 확률표집방법, 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방법 등, 과학적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되고 통계청의 엄격한 품질진단을 통해 그 질이 적절히 관리된다. 이 데이터에는 국민행복을 비롯하여 사회통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목적, 규모, 내용, 기간, 표본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표 1>을 참조할 수 있다.

〈표 1〉 사회통합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조사규모	전국 만 19세 이상 가구원 8,000명(최종 수집된 데이터는 8,077명임)
조사내용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조사기간	2021. 9. 1. ~ 2021. 10. 31.
표본설계	- 모집단 : 전국 만 19세 이상 가구원 -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화확률비례(계통)추출

출처: 202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조사 개요서 내용 발췌·정리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2〉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국민행복은 행복감, 삶의 만족도, 삶의 가치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구교준 외(2015)의 논의에 따라 국민들이 행복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hedonism적인 삶의 만족과 eudaimonism적인 삶의 가치를 포함한 것이다. 신뢰는 이웃, 친구/직장동료 등 친분 있는 사람,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뢰 인식 지표를 활용하였다. 참여는 정당, 노조/사업자단체/직업조합, 종교단체,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사회, 주민조직 등), 자원봉사/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등, 사회단체 활동 지표를 활용하였다.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 시도 소속감, 시군구 소속감, 읍면동 소속감 지표를 활용하였다. 시민성은 선거시 투표 참여, 정직한 납세, 법과 규칙 준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존중 등의 네 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연결성은 가족 간 소통, 직장 구성원 간 소통, 이웃 간 소통, 세대 간 소통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소수자 포용은 장애인, 조손/한부모 가정 등 결손 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등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각각을 자신의 이웃, 직장동료, 친구, 배우자 등의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동성은 자신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정치경제갈등은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계층갈등),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 갈등(이념갈등),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노사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세 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사회갈등은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세대갈등), 남자와 여자 간 갈등(남녀갈등), 서로 다른 종교 간 갈등(종교갈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외국인갈등)의 네 개 지표로 구성하였다.⁴⁾ 이러한 지표 구성은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 2〉에서는 각 지표별 요인적재치와 각 변수별 Chronbach's α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인적재치 0.5 이상, 신뢰도 계수 0.6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만 정치경제갈등 변수의 경우 Chronbach's α 값이 0.598로 유일하게 0.6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요인적재치가 적절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이 분석에서 제외됨으로써 갈등의 국민행복에의 영향에 대한 해석이 왜곡될 수도 있으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⁵⁾

4)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갈등 문항은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지역갈등),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환경갈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은 요인적재치가 0.5 이하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표 2〉 측정지표 요약

변수		측정지표	요인 적재치	α	척도
국민행복		행복감	0.836	0.803	0: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가치 없다 10: 매우 행복했다/매우 만족한다/매우 가치 있다
		삶의 만족도	0.867		
		삶의 가치성	0.837		
결속	신뢰	이웃	0.587	0.665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매우 신뢰한다
		친구 등	0.543		
		타인	0.844		
		외국인	0.827		
	참여	정당	0.849	0.916	1: 소속된 적이 없다 5: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노조, 사업자단체 등	0.846		
		종교단체	0.649		
		시민단체	0.899		
		지역사회 공공모임	0.721		
		자원봉사/기부단체	0.849		
		사회적 경제조직	0.893		
	정체성	국가	0.561	0.715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시도	0.781		
		시군구	0.807		
		읍면동	0.779		
	시민성	선거시 투표 참여	0.800	0.818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매우 중요하다
정직한 납세		0.847			
법치준수		0.836			
타인 의견 존중		0.732			
연결성	가족 소통	0.572	0.625	1: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소통	0.650			
	이웃 소통	0.770			
	세대 소통	0.743			
포용	소수자 포용	장애인	0.842	0.789	1: 받아들일 수 없음 5: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결손가정 자녀	0.860		
		이민자 등	0.814		
	이동성	자신의 이동성	0.873	0.687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자녀의 이동성	0.873				
갈등	정치경제갈등	계층갈등	0.773	0.598	1: 전혀 심하지 않다 4: 매우 심하다(*역코딩)
		이념갈등	0.723		
		노사갈등	0.737		
	사회갈등	세대갈등	0.692	0.722	1: 전혀 심하지 않다 4: 매우 심하다(*역코딩)
		남녀갈등	0.749		
		종교갈등	0.740		
외국인갈등	0.771				

5)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사회통합의 요소들과 국민행복의 측정은 대부분 국민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윤건·박준(2019)의 논의에서와 같이 사회통합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 그리고 신뢰나 정체성과 같이 많은 사회통합의 요소들이 주관적 측면을 배제하고 논의할 수 없다는 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의 한계 등에 기인한다.

3. 분석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48.35%, 여성이 51.65%로 여성이 약간 정도 많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0.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50대,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가구소득의 경우 600만원 이상이 23.6%로 가장 많고, 5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이 4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고졸이 40.39%로 높게 나타난다.

<표 3> 분석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성별	남자	3,905	48.4
	여자	4,172	51.7
연령	19~29세	1,277	15.8
	30대	1,169	14.5
	40대	1,294	16.0
	50대	1,883	23.3
	60세 이상	2,454	30.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82	4.7
	100~200만원 미만	615	7.6
	200~300만원 미만	979	12.1
	300~400만원 미만	1,273	15.8
	400~500만원 미만	1,351	16.7
	500~600만원 미만	1,571	19.5
	600만원 이상	1,906	23.6
학력	초졸 이하	525	6.5
	중졸	558	6.9
	고졸	3,262	40.4
	대졸 이상	3,732	46.2
합계	8,077	100.0	-

IV. 분석결과

1. 기술분석 결과

기술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국민행복은 10점 만점에 6.6점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5.0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에서 결속의 경우 신뢰는 4점 만점에 2.3점으로 중간 수준(2.5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다. 참여는 1.5점으로 중

간 수준(3.0점)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정체성은 4점 만점에 2.9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다. 시민성은 7점 만점에 5.6점으로 중간 수준(4.0점)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연결성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다. 포용의 경우 소수자 포용은 5점 만점에 3.0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이동성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다. 갈등의 경우 정치경제갈등은 4점 만점에 2.0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사회갈등은 2.4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다.⁶⁾ 변수들 간 다른 척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위해 최대최소법에 따라 표준화한 값을 제시하였다. 표준화값이 가장 큰 변수는 시민성 변수로 1점 만점에 0.763점으로 나타났고, 정체성, 국민행복, 연결성, 이동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가장 낮은 것은 참여로 0.125점이었으며, 정치경제갈등, 신뢰, 사회갈등, 소수자 포용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 중간 수준인 0.5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행복, 정체성, 시민성, 연결성, 이동성은 중간보다 높지만, 신뢰, 참여, 소수자 포용, 정치경제갈등, 사회갈등은 중간보다 낮게 나타난다. 사회통합의 전체 평균은 0.49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는데, 국민행복과 비교하면 사회통합 수준이 0.133점 낮게 나타난다. 요소별 평균을 보면 결속은 0.515점, 포용은 0.541점, 갈등은 0.399점으로 세 요소 중에서 갈등 요소가 가장 낮게, 포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4〉 기술분석 결과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준화값 ⁷⁾	
종속변수	국민행복	8,077	6.6	1.009	3.6	10	0.628	
독립변수	결속	신뢰	8,077	2.3	0.502	1	4	0.449
		참여	8,077	1.5	0.807	1	5	0.125
		정체성	8,077	2.9	0.511	1	4	0.647
		시민성	8,077	5.6	0.875	1	7	0.763
		연결성	8,077	2.8	0.496	1	4	0.591
	포용	소수자 포용	8,077	3.0	0.790	1	5	0.497
		이동성	8,077	2.8	0.636	1	4	0.585
		갈등	정치경제갈등	8,077	2.0	0.535	1	4
	사회갈등		8,077	2.4	0.518	1	4	0.464

2. 상관분석 결과

다음으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행복을 기준으로 독립변수들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참여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중에서는 소수자 포용 변수만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

6) 갈등의 경우 역코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값이 높을수록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낮을수록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7) 표준화값은 최대최소법($\frac{x - x_{\min}}{x_{\max} - x_{\min}}$)에 따라 구해지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의 값을 갖는다.

으로 유의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0.001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면 정체성이 0.261로 가장 높고, 이동성, 연결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정치경제갈등이나 사회갈등의 상관성은 모두 0.040으로 매우 약한 (+)의 상관성을 나타낸다.

〈표 5〉 상관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행복	신뢰	참여	정체성	시민성	연결성	소수자 포용	이동성	경제갈등	사회갈등
2	0.151***	1								
3	-0.016	0.068***	1							
4	0.261***	0.168***	0.020	1						
5	0.159***	0.138***	-0.211***	0.286***	1					
6	0.204***	0.364***	0.009	0.238***	0.156***	1				
7	0.032**	0.138***	0.055***	0.018	0.118***	0.050***	1			
8	0.258***	0.135***	0.048***	0.379***	0.117***	0.207***	0.010	1		
9	0.040***	-0.006	0.084***	-0.083***	-0.209***	0.031**	-0.102***	0.050***	1	
10	0.040***	0.063***	-0.095***	-0.044***	0.057***	0.052***	0.087***	-0.016	0.342***	1

*: p<0.05, **: p<0.01, ***: p<0.001

3. 회귀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별 변수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모델 1은 독립변수 없이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델이다. 모델 2는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 중 결속 요소들만 포함한 모델이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포용 요소들을 포함한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모델 4는 모델 3에 갈등 요소까지 포함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R2값은 모델 1에서 모델 2로 갈 때 0.0800만큼, 모델 2에서 모델 3로 갈 때 0.0186, 모델 3에서 모델 4로 갈 때 0.004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수별 표준화 계숫값을 살펴보면 신뢰, 참여, 정체성, 연결성 등 결속의 모든 요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그 방향은 (+)로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참여만은 미미하긴 하지만 (-)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를 통해 국민행복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함의를 준다. 김경미(2020)의 청소년 사회참여와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활동유형과 성별에 따라 행복에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 종교모임 참여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단체 참여나 팬덤활동의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민진·민보경·정우성(2017)의 연구에서도 참여와 행복 간 관계가 세대별, 참여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청년세대의 경우 정치·사회적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친목활동, 지역모임활동, 시민단체활동, 노조 및 직능단체활동 등에 대한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행복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참여 경험이 낮은 효능감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통합을 통해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참여 경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참여과정이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포용의 경우, 이동성은 국민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소수자 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미약하긴 하지만 (-)의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자 입장에서 소수자를 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적 노력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민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포용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독립변수	결속	신뢰	-	0.074***	0.070***	0.068***
		참여	-	-0.023*	-0.027*	-0.027**
		정체성	-	0.208***	0.156***	0.162***
		시민성	-	0.077***	0.078***	0.088***
		연결성	-	0.110***	0.094***	0.089***
	포용	소수자 포용	-	-	-0.013	-0.011
		이동성	-	-	0.149***	0.144***
	갈등	정치경제갈등	-	-	-	0.056***
		사회갈등	-	-	-	0.027*
통제변수	성별	0.016	0.027*	0.027*	0.027*	
	연령	-0.008	-0.052***	-0.051***	-0.051***	
	소득	0.101***	0.049***	0.046***	0.048***	
	학력	0.170***	0.141***	0.133***	0.135***	
F값		124.7***	144.3***	137.1***	120.1***	
R ²		0.058	0.139	0.158	0.162	
Adj R ²		0.058	0.138	0.156	0.161	
△ Adj R ²			0.080	0.018	0.005	

*: p<0.05, **: p<0.01, ***: p<0.001

모델 4를 통해 각 변수가 국민행복에 주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국민행복과의 긍정적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체성이며, 이동성, 연결성, 시민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갈등의 국민행복에의 영향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상관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통제변수에서는 학력, 연령, 소득, 성별의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다.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국민행복 수준이 높다. 이는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고, 남성인 경우 국민행복 수준이 낮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통합에 대하여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준거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사회통합과 그것의 목적으로서의 국민행복 간 관계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사회통합의 요소를 결속, 포용, 갈등의 세 요소로 구분하고 결속은 신뢰, 참여, 정체성, 시민성, 연결성, 포용은 소수자 포용과 이동성, 갈등은 정치경제갈등과 사회갈등의 하위요소로 구분하고 이러한 하위요소들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시민성, 정체성, 연결성, 이동성 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신뢰, 참여, 소수자 포용, 정치경제갈등(역), 사회갈등(역)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소수자 포용을 제외하고 모든 요소들이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는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참여나 소수자 포용이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의 주요 요소들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인식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정책에서 국민행복을 주요한 목표나 준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열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보면 사회통합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수단적 효용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한 지향점으로 국민행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낮게 나온 사회통합의 요소들이 있다. 신뢰, 참여, 소수자 포용, 정치경제갈등, 사회갈등 등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체성, 이동성, 연결성, 시민성 등 기술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요소들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신뢰나 정치경제갈등, 사회갈등은 국민행복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통합의 요소들 중 특히 낮은 수준의 참여와 그것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반대적 영향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율성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때 낮은 참여 수준이 증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참여는 필요하지만 세대별·참여유형별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박민진 외, 2017; Lühr et al., 2022), 더욱이 지속가능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효능감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부정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으로 참여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소수자 포용의 국민행복에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점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수자 포용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된 사회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할 때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 방향성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논문은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긍정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특히 모든 사회통합의 요소가 국민행복과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참여나 소수자 포용과 같은 일부 요소들의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심지어 반대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이 논문은 향후 두 변수 간 관계의 일반화를 위한 후속 연구들의 일정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사회통합 측정방식을 활용하여 방법론적인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측정방식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회통합실태조사’라는 고품질의 국가승인통계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정부의 사회통합정책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긍정적 관계는 정부가 국민행복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통합이라는 중간목표를 추구하는 것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사회통합이나 국민행복의 측정을 주관적 측면에 한정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이나 국민행복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활용 데이터의 속성상 분석단위가 개인이기에 객관적 측면을 반영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들의 객관적 속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결합이나, 분석단위의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극복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별로 접근하면서 사회통합의 전체적 측면의 접근이 미흡하다. 사회통합의 전체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론적 노력뿐만 아니라 측정방식과 같은 방법론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사회통합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방법론적으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상호 연관성과 배타성을 모두 갖는 지표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용어인 ‘국민통합’과의 관계 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동일한 의미로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와 ‘국민’이라는 용어의 차이에서 오는 개념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의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통합에 고유한 속성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갈상돈. (2017). 국민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공화주의적 제도화 방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중심

- 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87-117.
- 강시온·배호중·문상호. (2020).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합 인식 요인에 관한 데이터마 이닝 분석. 「사회복지연구」, 51(3): 5-38.
- 관계부처 합동.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고혜진·정해식. (2022).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 하여. 「보건사회연구」, 42(1): 217-237.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권다운·백진영·최창용. (2022).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변수 기반 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정책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1): 107-137.
- 김경미. (2020). 참여하는 청소년은 행복한가?: 사회참여 활동유형과 성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6(1): 141-164.
-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53(2): 97-121.
- 김병섭·최성주·최은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 김지원.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의 탐색. 「한국정책학 회보」, 30(5): 127-157.
- 김필. (2022). 비교행정의 새로운 국가분류기준: 사회통합과 정치-행정 관계. 「현대사회와 행정」, 32(2): 219-241.
- 남주하·김상봉. (2016). 한국의 국민행복지수 산출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시장경제연구」, 45(3): 119-143.
- 대통령실. (2022).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27. (<https://www.korea.kr/news/presidentView.do?newsId=148904128>, 2022년 10월 30일 검색)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98).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 대한민국정부. (2008).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박민진·민보경·정우성. (2017). 관계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민의 세대별 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1-30.
- 송정안. (2018). 4차 산업혁명과 사회통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1): 298-305.
- 신현재·김병섭. (2019). 정부의 기능별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행정논총」, 57(3): 63-88.
- 심수진. (2016).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21(3): 25-47.
- 여유진. (2020).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1(1): 59-89.
- 오봉욱·최종복. (2017). 지역사회 통합과 범죄피해 두려움: 사회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교정복지 연구」, 47: 47-69.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윤건·김철우. (2021).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7(4): 1-26.
- 이달휴. (2019). 사회통합의 개념에 있어서 다양성의 의미. 「사회법연구」, 37: 1-40.
- 이선중. (2021).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6(3): 73-90.
- 이희철·구교준·김지원·박차늬. (2020). 대한민국 행복지도: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응용. 「정책 분석평가학회보」, 30(1): 25-50.
- 전지훈·정문기. (2017). 공동체 인식과 행복의 영향관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 137-166.
- 정선욱·권지성·정해식·김성아. (2021).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5(2): 87-113.
- 정수현·한의석·정희욱. (2017). 한국 사회의 갈등양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 「미래정치 연구」, 7(2): 115-140.
- 정해식·구혜란·김성아. (2017).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370-405.
- 한인섭·임채홍·김정렬. (2017). 국민행복의 국가별 수준 비교: 국가레짐 및 거버넌스와 삶의 질에 대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55(2): 33-66.
- Baschera, W. L., & Schneider Hahn, I. (2022). Can Sustainable Urban Planning Determine People's Happiness and Well-Being? *Brazilian Journal of Management / Revista de Administração Da UFMS*, 15: 781-796. <https://doi-org.libproxy.hs.ac.kr/10.5902/1983465969433>
- Becchetti, L. , Massari, R. & Naticchioni, P. (2014). The drivers of happiness inequality: suggestions for promoting social cohesion, *Oxford Economic Papers*, 66(2): 419-442. <https://doi.org/10.1093/oep/gpt016>
- Choi, J. (2021). The Relationships between Satisfaction with Leisure/Work and Happiness of Elderly People: Focused on a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7(2): 24-31.
- Clarke, S. (2022). Freedom and Happiness: Does Freedom Make People Happ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Bulletin of Yerevan University*, 1(1): 140-155. <https://doi.org/10.46991/JOPS/2022.1.1.140>
- Danquah, M., & Ouattara, B. (2023). Aid and social cohesion.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87: 118-131. <https://doi-org.libproxy.hs.ac.kr/10.1016/j.qref.2022.11.008>
- Delhey, J., & Dragolov, G. (2016). Happier together: Social cohe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1(3): 163-176.
- Gallagher, S., Howard, S., Muldoon, O. T., & Whittaker, A. C. (2022). Social cohesion and loneliness are associated with the antibody response to COVID-19 vaccination. *Brain*

- Behavior and Immunity*, 103: 179-185. <https://doi-org.libproxy.hs.ac.kr/10.1016/j.bbi.2022.04.017>
- Gearhart, M. C. (2022). Social cohesion, mutual efficacy and informal social control: Collective efficacy and community-based crime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71. <https://doi-org.libproxy.hs.ac.kr/10.1016/j.ijlcrj.2022.100548>
- Kortsch, T., Rehwaldt, R., Schwake, M. E., & Licari, C. (2022). Does Remote Work Make People Happy? Effects of Flexibilization of Work Location and Working Hours on Happiness at Work and Affective Commitment in the German Banking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5). <https://doi-org.libproxy.hs.ac.kr/10.3390/ijerph19159117>
- Lühr, M., Pavlova, M. K., & Luhmann, M. (2022). They are Doing Well, but is it by Doing Good? Pathways from Nonpolitical and Political Volunteering to Subjective Well-Being in Age Comparis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3(5), 1969-1989. <https://doi.org/10.1007/s10902-021-00480-4>
- Maguire-Jack, K., Yoon, S., & Hong, S. (2022).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as Mediators Between Neighborhood Poverty and Child Maltreatment. *Child Maltreatment*, 27(3): 334-343. <https://doi-org.libproxy.hs.ac.kr/10.1177/10775595211007566>
- McKinnon, R. (2020). Introduction: Social security, inclusive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73(3): 5-12. <https://doi-org.libproxy.hs.ac.kr/10.1111/issr.12242>
- Nadeem, M., Anwar, M., & Pervaiz, Z. (2022). The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al quality on social cohesion: Evidence from worldwide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Affairs* (14723891), 22(4): 1-11. <https://doi-org.libproxy.hs.ac.kr/10.1002/pa.2630>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Spruk, R., & Kešeljević, A. (2016). Institutional Origins of Subjective Well-Being: Estimating the Effects of Economic Freedom on National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2): 659-712. <https://doi-org.libproxy.hs.ac.kr/10.1007/s10902-015-9616-x>

윤건(尹建):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공공기관 통합 후 융합 관리 사례연구, 2011)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BK21사업단 연수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한신대학교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 분야는 AI·데이터기반행정, 조직 및 인사관리, 사회통합, 재난안전관리 등이며, 저서로는 「E-Government: Innovations from the Korean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s」(2020),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연구」(2019) 등이 있고, 학술논문으로는 “정부 데이터 역량이 데이터기반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2022),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2021),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 혁신방향 탐색”(2020) 등이 있다.(kyoon2010@hs.ac.kr)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happiness

Yoon, Ku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happiness as its goal,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a reference point for social integration, whose importance is increasing now.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elements of social integration are divided into three elements: cohesion, inclusion, and conflict. Cohesion is divided into trust, participation, identity, citizenship, and connectivity, inclusion includes minority tolerance and social mobility, and conflict consists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flicts and social conflicts.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verified about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these sub-factors on national happiness. As a result of analysis, citizenship, identity, connectivity, and mobility appear relatively high, but trust, participation, inclusion of minorities, political economy conflict, and social conflict appear relatively low. As a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happiness, it was found that all factors, except minority inclusion, had an effect on national happiness. Contrary to the hypothesis that participatio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national happiness, it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Regarding this, it was discussed that participation or inclusion of minorities would require careful access in order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national happines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social integration, cohesion, inclusion, conflict, national happiness